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0년 9월 17일 (목)

**CONTENTS**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IB 2020-09)

---

## CONTENTS

I.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1

II.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6

III.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 14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9월 17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9월 3째주)는 <코로나19 재확산 특별판>으로 소상공인 위기, 중소기업 생존문제, 육아보육 문제점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파악,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기업 생태계 전환이라는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도약 방안을 강구했으며, 제3편에서는 '팬데믹 코로나 육아' 대책 마련을 위한 국내외 정책/입법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 제1편: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업계. 미증유의 사태로 대책 없는 폐업을 고려하는 업소가 50.6%, 90% 이상 매출감소를 겪는 업소가 60%에 이르는 상황. 또한, 비대면 온라인시장으로의 급격한 시장 이동으로 향후 전망도 암울. 전염병 확산 방지 효과가 의문시되는 서민경제 '셋다운' 식 방역 행정을 재고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차제에 정부는 생애주기별(현업, 휴·폐업, 퇴업) '맞춤형' 사회안전망 설계 등 체계적이고 원칙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에 나서야 함

## 제2편: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의 충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각. 이를 타개 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정부는 △신기술·신사업 도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리스크 분담 및 R&D 확대, △GVC·RVC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환경 조성, △경영자들의 디지털 인식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정부의 서비스 제공방식 및 정책 평가기준 제고 등에 적극 나서야 함

## 제3편: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나경태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윤경 연구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이 있는 가정은 '팬데믹 코로나 육아', '코로나 독박 육아' 상황에 직면.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중 최장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육아보육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이에 해외 육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재난 육아보육 재택근무제', '재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제안함



# 1.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작성: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kbbceo@hanmail.net)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업계. 미증유의 사태로 대책 없는 폐업을 고려하는 업소가 50.6%, 90% 이상 매출감소를 겪는 업소가 60%에 이르는 상황. 또한, 비대면 온라인 시장으로의 급격한 시장 이동으로 향후 전망도 암울. 전염병 확산 방지 효과가 의문시되는 서민경제 '셧다운' 식 방역 행정을 재고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차제에 정부는 생애 주기별(현업, 휴·폐업, 퇴업) '맞춤형' 사회안전망 설계 등 체계적이고 원칙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에 나서야 함

## 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늪'에 빠져 가는 소상공인 업계

□ 코로나19 재난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경제영역보다 직접적임

○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각종 통계 (유동인구율, 경기동향지수, 고용률 등)로 확인되고 있음

○ 경제영역 전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비상사태

□ 본 연구는 우선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심각함을 살펴보고자 함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0.09)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매우 부정적 +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96.4%로 압도적
    -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5%, ‘1,000만원 이상’이 19.2%로 나타남
  - 또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관련
  - 영업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69.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고로 이전 조사(2020.4月)에서는 ‘임대료’ 응답은 38.6%였음
  -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한다’가 50.6%로 조사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 ‘매우 심각한 위기’(90.7%), ‘다소 위기’(8.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해 3단계 격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
  - ‘3단계 격상은 소상공인 대책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59.2%) 등 부정적 의견이 많음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 ‘필요함’(매우 필요함 + 다소 필요함)이 96.1%로 조사
    - 지급 대상에 대해서 ‘선별적 지급’이 68.5%, ‘전 국민 지급’이 29.7%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된다면 향후 지역경제가 ‘호전될 것’(매우 호전 + 다소 호전)이라는 반응도 85.5%로 나타남



- ‘코로나19’ 관련 공과금 감면 정책
  -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이 46.1%로 높게 조사, 뒤이어 ‘전기료 감면’이 45.6%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우선순위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35.4%),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順

## 2.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환경

- 끝없이 추락하는 내수경기 하강
  -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국제간 방호벽 자체를 무너뜨리는 코로나 19 재난은 국내 소비수요 자체를 얼어붙게 하여 그 직접적인 피해가 소상공인 업계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음
- 비대면 온라인시장으로의 급격한 시장이동
  - 4차 산업 기술·소비성장 시대로 인해 온라인시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은 마치 기름을 붓듯 비대면 온라인시장으로 소비패턴을 급격하게 이동시킴
  - 문제는 비대면 온라인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업계가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든 것
- 구조적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과밀진입 우려
  -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시장이 침체하면서 조기 명퇴,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창업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

- 정부지원금 등 외부경제에 대한 의존경제 가속화
  - 소상공인의 의존경제가 심화될수록 자립경제에 대한 의지와 경쟁력이 약화됨
  - 따라서 자립경제를 강화시킬 산업구조 혁신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3. 정책방향 및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

#### □ 소상공인 정책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설계

- 소상공인은 사회안전망 소외계층으로 자연적·경제적 재난 및 경기침체 등에 특히 취약
- ‘현업 → 휴·폐업 → 퇴업’이라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로 각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설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휴업: 동종업종을 계속하려는 의지 하에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
  - 폐업: 업종전환 또는 소상공업에서 이탈을 고려하는 상태
  - 퇴업: 소상공업을 완전히 접고 은퇴

#### □ 재난지원금은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되어야 함

- 장기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정지된 업종
- 부분적인 영업제한 업종
  -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마다 상이한 행정명령 기일의 차이를 반영

- 1차 지원에서처럼 지급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구간 내 사업자와 동일한 지원금 적용
  - 영업정지 업종 중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
  
- 이외 전기세, 통신비 등의 공과금·세금 감면
  
- 경제 또는 국민건강 중 명확한 우선순위 정하여 방역 행정 시행
  - 위험시설 구분 등으로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시설 이용 중의 감염보다 생활 속 전파 감염, 즉 가정생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전파 감염이 더 크고 위험하기 때문
    - 현재 고위험시설 등의 구분 또한, 생활환경에 밀접해 있고 이용이 자유로운 업종이 되어야 합당
  
  - 확진자의 증가에 대한 임시방책으로 서민경제 자체를 ‘셋다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방역 행정에 불과
    - 개인위생과 전염병 예방 의식 고취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

## II.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작성: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ajung@kosbi.ke.kr)

코로나19의 충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각.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정부는 △신기술·신사업 도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리스크 분담 및 R&D 확대, △GVC·RVC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환경 조성, △경영자들의 디지털 인식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정부의 서비스 제공방식 및 정책 평가기준 제고 등에 적극 나서야 함

### 1.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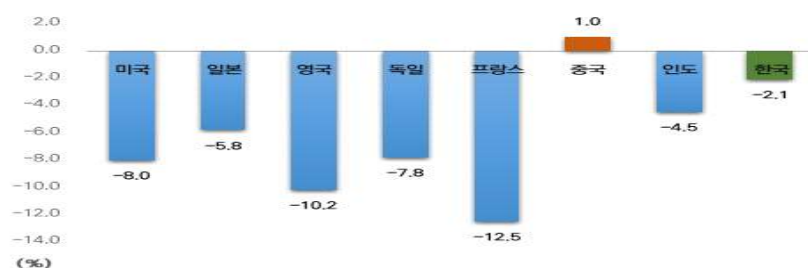
####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장기화로 세계 경제 침체

- 수요와 공급의 경제 충격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예상

#### ○ 재무건전성과 산업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의 충격이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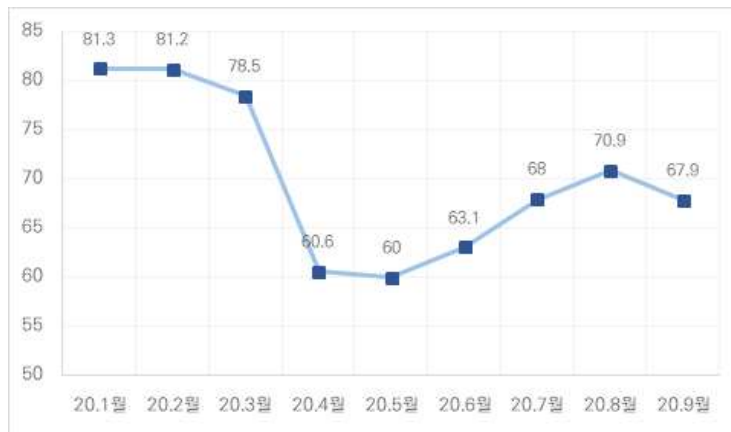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 특성상 손실 감내 능력 및 위기 대응 여력 한계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충격의 파급 효과 증대

[그림 II-1] '20년 성장률 전망(20.6월 기준)



\* 자료: IMF

[그림 11-2] 중소기업 체감경기(실적 SBHI)



\* 주: 2019년은 19.1~12월 평균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불가피성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

○ 본고는 중소기업들의 위기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2. 경영악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향

### □ 재무 악화 대응

○ 재무계획을 세우고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채널 (channel)을 최대한 확대

- 미수금·매출채권·재고자산 등 현금화 방안을 우선순위화하여 실행하고, 단기 채무를 장기채무 전환, 불요불급한 사업정비, 비핵심 자산처분, 비핵심 기능 아웃소싱, 자금상환 스케줄 재조정 등

○ 인적·기술적 측면의 성장성 분야의 자금 조달 방안 마련

- 기업의 변화를 파악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결정하고, 해당 업무의 인적·기술적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 역량 기반 마련
- 자본 한계 시 현금 외 보상, 지분참여 등을 통해 핵심 역량 유출 방지

□ 경영 및 인력 관리 대응

○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목적과 과제의 우선 순위에 맞게 의사결정 수행

-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계획과 기업의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

○ 현장의 직관적 대응과 리더의 빠른 결정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위기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직관이 중요할 때가 많으므로, 현장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리더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예측하면서 현재를 유지하고 대비

- 리더는 단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방향과 목적을 염두하면서 ‘넥스트노멀(next normal)’의 혁신을 대비

○ 직원들의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재택근무와 데이터보호 시스템의 비대면 전환에 대비

-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은 디지털 공급시스템과 인력 계획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대체 옵션 최적화

### 3. 중소기업의 미래 도약 대응 방향

#### □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대응

- 소비자들의 변화 트렌드를 빠르게 포착하여 완벽함보다는 속도감 있게 대응
  - 비대면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재택근무, B2B 채널 증가, 웰빙과 안전의 중요성, 자율주행차 등의 변화에서 소비자들의 니즈(needs)는 무엇이며, 이러한 니즈가 기업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
  -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완벽한 계획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우선 실행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빨리 시도한 후,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합리적
- 기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된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시장·유동성·운영·관리·고객 등을 통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 환경에서 기업의 가치가 어느 단계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스마트 경쟁력 확보
  - 최적화 방법은 유연한 가변성과 모듈화로 가능
    - M&A, 브랜드간 협업, 공유경제, 기능 융·복합, 가변 설계 등도 가변성을 높이고 기능을 모듈화하는 것
    - 디지털화와 애자일(Agile) 방법은 업무를 쉽고 빠르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줌

○ 공급망(supply chain)을 다변화하고 파트너십 체계 구축

- 코로나19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함께 회복력도 중요함을 보여주며, DX(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기술인프라서비스의 네트워크 복잡성 가증
  - 공급리스크 최소화 및 적시조달을 위한 멀티소싱 전략 수립
  - 지역 공급망 구축 및 물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물류 백업플랜 수립
  - 기업의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는 기술 및 업종의 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

□ 혁신대응의 주도권 확보

○ 기회를 포착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기술, 신사업의 성장발판 마련

- 과거 ‘혁신’이라는 단어는 기업 ‘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였지만, DX 시대에서는 ‘생존’의 의미
-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확보
  - 롯데쇼핑은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은 수소충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집중

○ 비대면 경제, 디지털 기술 환경에 적응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공정의 자동화 및 고도화와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작용
- 공급업체는 AI와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생산·수요를 예측하고 대응
  - Taulia와 JPMorga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세계 중소기업이 안전하고 빠르게 저렴하게 비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영향이 큰 기업들은 새로운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스마트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을 통한 O2O 공급 네트워크 다변화 및 영업 채널 확대
  - 디지털 경제에서 고객 전달가치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기업 경영자들은 ICT 기술을 통한 서비타이제이션 확대 방안 마련
    - 2019년 4월 미국·영국·호주·싱가포르·홍콩 등 13개 국가 8,022명을 대상으로(B2B포함) ‘고객경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가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 66%가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지불 용의가 있음을 확인
- 불확실성 증가와 디지털 전환으로 정부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 정책을 외부환경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책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국가의 지원 및 개입 정도에 따라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입에 따른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

## 4. 정책 제언

-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신기술·신사업 도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 조성 및 규제 완화 필요
  - 신산업과 관련된 R&D와 융합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배분 및 정책 조정
  - 온라인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등
-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도전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고 디지털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확대 지원
  - 신산업 발굴·육성, 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한 리스크 정부흡수
    - 정부의 선투자 후, 민간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는 파트너십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중소기업과 IT개발업체, 유통·서비스업체의 파트너십 지원하고 Scale-up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투자
- GVC, RVC 공급망 다변화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해외 진출 촉진
  - 지역 네트워크망이 구축되고 수출입선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며, 동종 및 유사업체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공급망 조성
  - 지역 B2B 수출과 비대면 SW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R&D와 현지 진출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 환경 조성
  - ‘생산(제조)’과 ‘기술(R&D)’의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 구매조건부 R&D 활성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R&D와 판로 간 연계 강화
  - 데이터 독점 방지 및 이용 지원
    - 기업들이 정보의 비대칭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경영자들의 디지털 인식 제고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 경영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장 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 인식 제고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 디지털 사이언티스트(Digital Scientist) 양성과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서비스 제공방식 및 정책 평가기준 재고
  - 정부-기업-소비자 간의 인터렉션(interaction) 서비스 구축
  - 성과와 목표달성보다는 혁신과 새로움, 도전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의 평가방식 변화

### Ⅲ.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작성: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 이윤경 연구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이 있는 가정은 ‘팬데믹 코로나 육아’, ‘코로나 독박 육아’ 상황에 직면.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중 최장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육아보육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이에 해외 육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재난 육아보육 재택근무제’, ‘재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제안함

#### 1. 현황

#####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육아’ 상황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T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포, 이에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시설이 휴업 상태에 돌입하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됨
- 코로나19 이후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sup>1)</sup>에 이르고,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함<sup>2)</sup>
- 또한, 맞벌이 가구는 49.4%, 외벌이 가구는 21.2%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sup>3)</sup>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설문조사

2)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3)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 만 2세 이하 영아는 12%, 만 3~5세 유아는 17%가량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반면, 초등 저학년의 돌봄교실 이용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절반가량 줄어 6% 정도에 불과<sup>4)</sup>

## 2. 정부 시행 중 육아보육 정책

###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도입 예정, 흥남기 부총리 2020.8.27.)

-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 서비스 시장을 공식화
-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밝힘

### ○ 경기도 가평균 1:1 맞춤형 아이 돌봄 사업(2020.9.1. 시행)

- 아이돌보미가 전문적인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아동 식사 제공 및 등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12세 이하 아동 대상

### ○ 가족 돌봄 휴가(도입)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연간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로 연장
-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안 확보
- 1일 5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 정부 지원

4)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 육아휴직(시행 중)

- 최장 1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
- 휴직 시 급여는 3개월까지 월 최대 150만 원, 4개월부터는 최대 120만 원을 지원

○ 재택근무(시행 중)

- 아동의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가 아닌 코로나 확대로 인한 IT 기업 위주로 재택근무가 이뤄지고 있음

### 3. 국회 법안 제출 현황

○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법’ 중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전환

- 코로나19로 교육·보육기관이 휴업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 이에 연간 최대 10일 무급휴가로 제한된 현행 가족 돌봄 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로 전환
- 유급휴가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

○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 발의

○ 가족돌봄휴가 90일까지 연장(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현재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 관련 법안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발의

○ 육아휴직 신청 아동 연령을 8세에서 10세로 확대(이규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발의

#### 4. 코로나 19에 따른 육아 관련 해외 사례<sup>5)</sup>

○ 긴급돌봄 관련 지원

〈표 III-1〉 주요국 긴급돌봄 관련 지원

국가	대상자 조건	지원 내용
미국	- 필수근로자만 이용 가능 또는 우선권	- 돌봄센터 지도 제공 -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돌봄 제공 가능한 그 외 사람에게 보육보조금 제공
영국	- 필수근로자와 취약계층 자녀	- 무상보육 및 세금 감면 혜택받는 가정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

5)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 13,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정익중

국가	대상자 조건	지원 내용
호주	- 필수근로자와 취약계층 자녀에 우선권 제공	- 집에서 자녀 양육 시 수수료 지불하지 않고 등록 상태 유지 가능
싱가포르	- 필수근로자만 이용 가능	- 유치원 참석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지원 및 지원금 제공(정부 50 : 보호자 50)
일본	- 방과 후 아동클럽 이용하는 저학년 또는 보호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곤란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 교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 투입

○ 아동 양육비 및 물품 지원

〈표 Ⅲ-2〉 주요국 아동 양육비 및 물품 지원

국가	지원유형	지원 내용
미국	양육비 지원	- (뉴욕) 주정부 평균 소득 수준 85%까지 자격 확대, 모든 필수근로자에게 육아지원금 제공 - (텍사스) 아동당 500달러 추가 지원
	아동 물품 지원	- (뉴욕) 필수용품 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독일	양육비 지원	- 아동당 월 최대 185유로 지원(1유로=1,400원) - 가구당 300유로 추가 보너스 지급 - 한부모 가정일 경우 세금 감면액이 일반 가구 2배 이상 혜택 - 기존 부모수당 대상기준 완화/ 15% 세금 감면 (소득에 변동이 생긴 부모, 맞벌이 부모에게 우선 혜택)
캐나다 <sup>6)</sup>	양육비 지원	- 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을 350만 가구 대상으로 5월부터 증액해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지원 액수를 C\$300 늘려, 5월 지급금에 자녀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액이 C\$300 증가 - 평균적인 보조금 증액 액수는 가정당 약 C\$550
싱가포르	보호자 수당	- 휴원 기간 동안 유치원과 보호자에게 50:50 보조금 지급
	바우처	- 모든 아동 대상, 식료품 및 양육비 바우처 지원
영국	바우처	- 무상급식 아동 대상, 식료품 수령, 현금, 바우처 지원
프랑스	응급식료품바우처	- 보육시설 등교, 월 소득 1000유로 이하 가정, 바우처 지원



○ 돌봄휴가 지원

〈표 III-3〉 주요국 돌봄휴가 지원

국가	제도명	가족돌봄 허용	유급 인정
미국	Paid Leave	- 가족 중 돌봄 필요한 구성원이 심각한 건강 상태인 경우	- 최소 5일간 유급병가 제공 및 근로자 권리 보호
	Paid family & Medical leave	- 가족돌봄 병가, 개인 병가	- 유급 및 휴가 지원
프랑스	특별 육아휴직	- 16세 미만 자녀 보호자인 직원 육아 돌봄 위한 휴직	- 유급휴직이 어려운 경우 유급휴가 지원
	특정 병가제도	- 자녀돌봄 가정 부모 휴직 권고 및 병가 절차 간소화	- 임신 등 건강 취약 직원 (보수의 84% 지원)
영국	법정 유급휴가 기간 연장	- 동거인 중 확진 및 격리 대상자 있는 근무자 해당	- 법정 유급휴가로 최대 28일 고용주 지급 보장

## 5. 정책 대안 제안

○ 코로나에 따른 육아보육 정책 현황: ‘코로나 독박 육아’

-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학교와 학원, 유치원이 휴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육아보육 문제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현재 나와 있는 정책으로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워 당이 전면적으로 지원정책 마련해야 함

○ 주요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 포인트

- 미국: 긴급 돌봄 센터 설립, 보육 보조금 지원, 돌봄 유급 휴가 제도 도입

6) 캐나다, 코로나19경제 지원안, <https://joyvancouver.com/covid-19-26/>

- 영국: 근로자와 취약계층 자녀에 긴급 돌봄 무상 지원 및 세금 혜택 정책, 무상급식 아동 대상 바우처 제공, 돌봄을 위해 최대 28일까지 고용주 지급 보장
- 독일: 아동당 양육비를 최대 185유로(약 25만 원), 가구당 300유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
- 프랑스: 아동 돌봄을 위해 특별 육아휴직제도 중 16세까지 가능, 특정 병가제도를 통해 건강 취약 직원 임금의 84% 지원
- 일본: 교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을 투입하여 긴급 돌봄 제공

#### ○ 정책 제안

- 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법’ 홍보 및 통과 노력
-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 육아보육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며 연령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함
- 긴급재난 발생 시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여 ‘재난 가족 돌봄 휴가제’를 도입,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업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일, 2018.11.22~現在)

###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핑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 ▶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 ▶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 ▶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 ▶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 ▶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